

#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기술사회' 제시

조셉 애거시 지음 「현대문명의 위기와 기술철학」

장희익

서울대 교수 · 물리학

이 책은 한마디로 원본(Technology: Philosophical and Social Aspects, Reidel, 1985)의 제목과 같이 기술 특히 그것의 철학적, 사회적 측면을 문제삼은 책이다. 사실상 기술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출현하여 인류와 그 역사를 함께 해왔으나 지금까지는 그것의 철학적, 사회적 측면이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것이 지닌 심각한 문제성이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에 바탕을 둔 이른바 과학기술의 위력을 감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를 오직 충실한 도구로 생각하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개발하면 할수록 좋은 것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인류의 파멸에 기여할 수도 있겠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끔찍한 것으로 내동댕이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맹목적인 기술개발주의나 무조건적인 기술기피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으며 기술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함께 이를 올바르게 다루어나갈 현실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기술사회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당면하여 기술의 그 본원적 양상을 바로 보고 올바른 대처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며, 이에 관련하여 이 책은 많은 점에서 의미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진단하는 상황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있으며, 철학자다운 냉철한 면밀성과 폭넓은 학문적 식견을 구사하여 사태를 날카롭게 파헤쳐 나간다.

논의의 주된 공격목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가담하고 있는 우익경제진영으로 향하고 있다. 군산복합체와 다국적기업으로 대표되는 극우 기술관료주의뿐 아니라 온건성을 내세우는 이른바 케인즈주의도 자유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소비자선호이론을 내세우는 한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보며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반기술주의나 극좌 마르크스주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또한 비현실적이며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함께 배격한다. 특히 그 자신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기술사회이다.

현대보다 더 많은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요청되고, 더 많은 권한이

다양한 계층에 이양되며,

더 많은 협력이 국내외적으로

요청되는 세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기술의 개발에 앞서

'사회적 기술'의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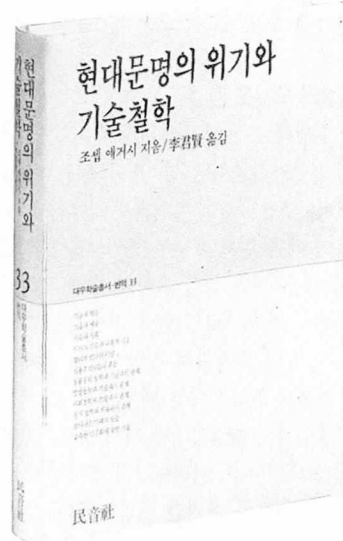
급진적 환경주의자들을 신뢰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즉 급진적 환경주의자들은 사실을 과장함으로써 자신들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급격히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 자신의 대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한마디로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기술사회라는 것이다. 즉 이것은 현재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요청되고, 더 많은 권한이 다양한 계층에 이양되며, 더 많은 협력이 국내외적으로 요청되는 새롭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태계적으로 균형된 세계이며, 교육받은 제한된 인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며 우리는 앞으로 '물리적 기술'의 개발에 앞서 '사회적 기술'의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물론 기술 자체의 개념에 대한 그의 예리한 철학적 통찰이 깔려 있다. 즉 그는 기술이라는 것을 단순히 사물의 통제수단만으로 보아서의 안되며 그 사회적 맥락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이 현실에 적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적 기술'이 함께 따라야 하는 것이나 지금까지는 이 점이 도외시됨으로써 많은 기술사회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 교육 개혁 통해 기술관료체제 극복

이러한 대안적 사회는 물론 철저한 합리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기술적 운영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은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 왕의 손에 위임될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일반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주시되고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넓은 관용과 함께 반론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제한없는 사상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특히 그는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구분하면서 사상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 행동의 자유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나마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한편 위정자의 처사는 철저히 주시되어야 하며 그 권한 또한 크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여 기술적 사항을 위임받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인들의 철저한 감시와 승인 아래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는 오히려 기술이 전문성을 빙자하여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이른바 기술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기술관료체제로 향하고 있으며, 여기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과연 민주 시민이 전문가들의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고 감시할 만한 능력을 지닐 수 있는가 하는 데로 귀착된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 저자는 이른바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이는 오직 지적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교육의 개혁에 의하여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이상적 사회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은 저자 자신의 말과 같이 교육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교육제도를 누가 어떠한 철학 아래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은 과연 어떠한 내용을 지녀야 하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도 깊은 논의가 없이 문제로 남겨놓고 있다. 예를 들어 생태계 보존이 지상의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 때 그것이 만일 일반인들에 충분히 교육되고 인식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민주적 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인류의 파멸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 해결을 위한 문제제기

우리는 물론 이 한편의 책에서 이 모든 것의 해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저자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이 책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많은 중요한 사항들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현대 기술문명의 위기를 우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읽고 음미할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의 번역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책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책은 번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저자의 문제뿐 아니라 그 논의의 방식은 매우 정교하여 주장과 양보가 수없이 교체되고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산만히 하여도 그 서술의 본의를 놓치기 쉽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번역에서는 여러 곳에서 저자의 주장과 상반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번역이 들어 있으며, 이 점이 바로 전반적으로 역자의 좋은 문장력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본을 읽어내가기에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루 속히 개역본이 나오기 바라며 그때까지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독자들이 원본과 함께 읽어내감으로써 번역자체에서 오는 오해를 피하도록 권하고 싶다.

민음사/A5신/400면/11500원